

나주 농장서 'AI항원' 또 검출...전남 11번째

폐사 증가 신고 검사 결과 5일 'H5형 AI 항원' 검출돼 고병원성 확진 여부 검사 진행 중, 결과 1~3일 소요

나주시 동강면 육용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전남도가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긴급방역 조치를 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장주가 폐사 증가 신고를 한 나주 동강면 장동리 육용오리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5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에서 육용오리 1만2000마리를 사육 중이었다.

올 겨울 들어 전남지역 가금농장에서 'H5형 AI항원' 검출은 이번이 11번째이다.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1~3일 소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AI 항원이 검출되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발생농장을 포함해 반경 2km 내 가금농장 3곳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3만1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반경 10km 특별방역 지역에는 51개 농장에서 닭·오리 301만5000마리를

사육 중인 가운데 방역차 18대를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임상예찰을 진행 중이다.

항원이 검출된 오리농장과 관련 시설에 대해선 7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도 발령했다.

전남도는 방역지역 내 49개 농장과 동일계열 33개 농장에 대해서도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농장 간 수평감염 차단에 전력을 쏟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개 시·도의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10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전남지역 누적 발생은 가금류 10건, 야생조류 12건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나주와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양지역에 한해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과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나주·영암 지역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정 범위 확대는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나주=송준표 기자



광주지방보훈청, 갑질 예방교육 실시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은 직장내 소통활성화 및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일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보행보조기 전달로 지역사회 실천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천용호)는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최근 영광 흥농읍사무소(읍장 임형표)에 보행보조기를 전달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양경찰,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 현판식' 개최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는 최근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나주경찰, 치안 협력에 기여한 관제 요원에게 감사장 수여

나주경찰서(총경 박상훈)는 지난 2일 나주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CCTV 관제센터)에서 차량 절도범 검거 유공 및 만취자 사고 예방 등 공동체 치안 협력에 기여한 관제 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나주=송준표 기자



무안소방,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의용소방대원 모집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지역 민간소방의 중심 조직으로써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의용소방대원을 공개모집한다.

무안=이기성 기자



담양 생활안전순찰대-곡성군, '2022 희망복지지원서비스'

담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곡성군 희망복지지원센터와 협업체 최근 삼기면 괴소마을에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면서 2022년 생활안전순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자·유족 75명, 국가·부산시 상대 소송 제기

사회복지 시설 인권침해 관련 첫 소송 민변, 청구 취지 확대·추가 소송 가능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광주·전남 운수 노동자들이 화물차 안전 운임제(최저임금제) 확대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갔다.

화물연대 광주·전남본부는 총파업 12일째인 5일 오전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노동의례, 연대사, 투쟁사, 투쟁가 제창 순으로 열렸다.

노동자 5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품목 확대, 정부의 안전 운임제 개악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어 투쟁가를 부르며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했다.

박성진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은 연대사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졸음으로 인한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며 "대형 화물차는 사고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운에 목숨을 맡기며 무고한 희생자를 봐야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죽음의 일터로 되돌아 갈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2지부장도 투쟁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정부는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규정하면서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있다"며 "불법인 과적을 감요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생존권 사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일시 | 2022. 12. 6.(화) 오전 10:30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센터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에 참석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코카콜라공장 정문 앞에서 오비맥주 후문까지 도보 행진을 벌였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

로·과속·과적 운전을 막기 위해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최이슬 기자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를 앞둔 6일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에서 한 시민이 다양한 크리스마스 소품과 트리가 진열된 상가 앞으로 지나고 있다.

7차례 성범죄 반성 안하고 또 추행한 50대 징역 5년

법원 "범행 내용·방법 등 죄질 불량, 용서받지도 못해"

수차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여아를 강제 추행한 50대 피고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전남 고흥군 한 항구에서 공중화장실로 향하는 여성을 따라가 몰래 흡취 보고, 같은 날 저녁 처음 본 여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취볼 때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 형사처벌이 7회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주 5인조 금은방 절도 공범 추가 입건

새벽시간 광주 도심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10대 절도단 중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던 공범 2명이 추가 입건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6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범행을 계획하고 공모한 혐의(특수절도)로 A(19)·B(19)씨를 나란히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일 광주 동구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C(16)·D(15)·E(12)군을 만나 금은방 절도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실제 범행을 착수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고와 채무 등을 이유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C군이 자신의 이륜차(오토바이)를 망가뜨린 데 따라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을 배달대행업체에서 구해다 주며 각자 역할을 나누게 했다.

모의에 따라 C군 일당이 2일 오전 3시 30분께 동구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3000만 원 상당을 훔쳐오자 A·B씨는 판매 목적으로 일부를 받아 챙겼다.

그러나 이내 C군 일당이 검거되고 자신들을 향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전날 오후 동부경찰서를 찾아 지수했다. 지수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금속 일부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회수된 귀금속이 약 7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는 점을 토대로 A씨 등이 장물 일부를 숨기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재환 기자